

李 대통령 재산 331억 기부

대선 공약 지키고 국민통합 끌어내기

‘MB정부=부자정권’ 꼬리표 떼 이미지 개선 쇄신책 발표 앞두고 국정 주도권 확보 목적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것은 대선 과정의 약속을 지키는 뜻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상생의 사회를 앞당기자는 의미가 있다고 있다. 이와 함께 촛불 사태, 용산 참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 등을 거치면서 크게 약해진 국정 장악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 통합 메시지=우선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는 대선 과정의 약속이기는 하지만 최근 내세우고 있는 서민 행복과 맥을 함께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재산 기부라는 카드를 제시하며 상생의 사회와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 대통령은 이날 재산기부와 관련된 글을 통해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가 서로를 돕고 사랑과 배려가 넘쳐나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계재단을 청소년 장학사업에 초점을 둔 것은 소외계층을 위한 서민정책의 실천이자 ‘중도실용’의 폭을 넓히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부자 논란’ 해소=이번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로 강부자(강남 땅 부자) 정권이라는 이미지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권의 수장인 대통령의 재산 기부에 나섬에 따라 ‘도덕적 정권’이라는 이미지가 확보

된 것은 물론 재산 환원 시기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도 마무리 됐다. 즉, 이 대통령이 솔선수범에 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 이른바 ‘MB정부=부자정권’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정권 차원의 도덕적 이미지 강화를 계기로, 추후 국정 운영에서 각종 개혁 정책

을 밀어붙이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전략도 담겨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로 부자 정권, 특권 계층을 위한 정권이라는 이미지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추후 국정 운영에 상당한 힘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국 주도권 확보=재산 기부 발표가 내각 및 청와대 개편, 8·15 대국민 메시지 발표 등 구체적인 국정쇄신책 제시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즉, 재산 기부를 통해 형성되는 우호적 여

론 등을 바탕으로 국무총리와 대통령 실장 등이 포함된 대규모 인적 개편과 대국민 담화 등 국정쇄신책을 차례로 발표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아간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의 유렵 3개국 순방 성과와 함께 대대적인 국면전환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를 환영하지만 그 내면에는 여러가지 정치적 함의가 담겨져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기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일 설립된 위원회 위원장인 송정호(가운데) 변호사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감사 김창대 세일이앤씨 대표, 오른쪽은 이사 유장희 이화여대 교수. /연합뉴스

에너지 자급자족 녹색마을 2020년까지 600곳 조성

정부 ‘폐자원·녹색 에너지 대책’ 발표

2020년까지 폐자원이나 농업 부산물 등을 활용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인 ‘저탄소 녹색마을’ 600곳이 조성된다.

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녹색연료) 에너지 대책’을 발표했다.

◇에너지 자급자족하는 마을 조성=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은 내년부터 농촌과 소도시를 중심으로 각각 다른 유형의 저탄소 녹색마을을 조성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2012년까지 농식품부는 농어촌형 2곳, 환경부는 도시형 2곳, 행안부는 도·농(郡農) 복합형 2곳, 산림청은 산촌형 4곳 등 모두 10개 마을을 시범 저탄소 녹색마을로 만든다.

일상생활, 산업 활동의 부산물로 생겨나지만, 에너지로는 활용되지 못하는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비와 체계를 갖춰 에너지 자급도를 40%로 높인다는 것이다.

농식품 산재물, 축산 폐수, 농업 부산물, 음식물 쓰레기, 폐식용유, 잔가지·낙엽 등 임목 부산물, 폐가구, 가연성 생활폐기물, 태양광·풍력·소수력 등 자연에너지 등이 활용 대상이다.

일례로 농식품부는 시범마을 한 곳당 265억 원을 투입해 농촌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농촌형 에너지 자립 녹색마을’을 만들 계획이다.

40~50가구 규모의 마을에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목재 펄릿(압축목재 연료) 보일러 외에도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을 지어 지속 가능한 미래형 농촌 마을의 모습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시범마을이 성공하면 이를 확산시켜 2020년까지 저탄소 녹색마을 600곳을 만든다는 목표다.

◇가축분뇨·나뭇가지 에너지화에 박차=유기성 폐자원, 임목, 해조류, 옥수수·벼짚 같은 초본 등 바이오매스를 에너지화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환경오염, 산불 유발의 주범이었던 가축분뇨, 잔가지 등을 에너지원으로 쓰기로 한 것이다.

2013년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94개(농식품부 76개, 환경부 18개) 설치해 자원화 비율을 현재의 84%에서 90%로 끌어올리고,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15개를 설치해 매일 270만kg의 전기를 생산하기로 했다. 9천여 농가가 한 달간 쓸 수 있는 전기다.

또 2013년까지 국토 면적의 10%인 127만ha에 대해 숲 가꾸기 사업을 벌여 나오는 잔가지·낙엽, 작물 등 임산잔재물 650만㎥를 수집해 52만톤의 목재 펄릿을 공급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남미 등 해외에도 생산기지를 만들어 35만톤을 공급하는 등 87만톤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동해안, 제주도 연안의 ‘바다 사막화’ 현상(백화현상·연안 암반에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흰색 산호류로 뒤덮이는 현상) 방지와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추진할 ‘바다 숲’ 조성을 통해 해조류 바이오매스도 확보한다.

바다 숲이란 바다 속에 인위적·자연적으로 만든 해조류 군락지를 말한다. 정부는 2013년까지 연근해에 7천ha의 바다 숲을 조성하고 2020년까지 50만ha 규모의 대규모 해조류 양식장을 만들 계획이다. /연합뉴스

李 대통령 “어머니와의 약속 실천 뿌듯” 재단법인 ‘청계’는 청계천 복원사업서 따와

이명박 대통령이 재산 사회 기부를 약속한 것은 대선 과정에서 검찰이 이른바 ‘BBK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지 일주일 뒤인 2007년 12월 7일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KBS 선거방송연설을 통해 “우리 내외가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가진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재산기부 준비 작업이 본격화된 것은 올해 초반으로 이 대통령의 고려대 61학번 동기로서, 지난 대선 당시 후원회장을 맡았던 송정호 전 법무장관이 ‘재산기부 추진위원회’를 책임지면서부터다.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는 어머니 등 개인적 성장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난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올곧게 키워내고 남을 돕는 데에도 인색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영향과 함께 가난했던 시절 ‘평범한 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학업을 계속한 끝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 CEO에 이어 서울

시장, 대통령에게 오른 성장 과정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소회 발표문에서 “저에게 이런 마음이 영글도록 한 뿌리는 어머니”라면서 “어머니와의 약속을 실천했다는 것을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기부하면서도 이를 거창하게 발표하는 것을 꺼렸다는 후문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재단설립추진위원회 측에

서 발표 계획을 보고하자 ‘원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평소 소신을 들면서 “발표를 꼭 해야 되느냐”고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사회기부 활동을 맡게 될 재단법인의 명칭이 ‘청계(淸溪)’로 결정된 것은 청계천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이를 교두보로 삼아 ‘대권신화’까지 일궈낸 배경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도청별관 10인대책위 오늘 국회서 토론회

옛 도청 별관 문제 해결을 위한 10인 대책위원회(간사 조영택 의원)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여 해법을 본격 논의한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강박원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등으로 구성된 10인 대책위는 7일 그동안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토론회를 벌일 것이라고 6일 밝혔다.

10인 대책위는 그동안 정부 측과 5월 단

체, 설계자와 건축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었으나 대책위원들끼리 직접 토론회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대책위의 활동 기한인 15일이 임박한 여파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날 대책위의 논의는 어느 때보다 그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위는 앞으로 몇 차례 논의를 더 가진 뒤 15일 이전에 해법을 제시할 방침이다. /북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